무상 기증에 놀아난 장흥군 어리숙 행정에 혈세만 낭비

기증 정자 '창랑정' 소유권 안 챙겨 2018년 향토문화유산 지정 기증 후손, 3자 매각도 모르고 예산 2억원 들여 보수·관리 군비 들여 매입 추진에 빈축

장흥군이 무료로 기증받았던 문화재를 돈을 주 고 사들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증받은 문 화유산의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장흥군의 허술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흥군은 기증받았던 문화유산 소 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줄도 모르고 예산 까지 투입해 보수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 고 있다.

15일 장흥군과 지역문화계 등에 따르면 군은 지 난 2008년 5월 장흥읍 탐진강변에 위치한 정자 '창랑정'을 소유자 후손들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

창랑정은 고(故) 길행식 씨가 1918년 장흥읍 연산리에 건립한 49㎡ 규모의 정면 4칸•측면 2칸 의 목조 팔작지붕 구조물로, 정신 수양과 학문 연 마 공간으로 활용됐다.

후손들은 건립자 길씨가 숨진 뒤 "전통문화 교 육장으로 활용해 달라"며 지난 2008년 5월 장흥군 에 무상으로 기증했고 장흥군은 2010년에 군비 2 억원을 투입해 지붕 개량,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보수 공사까지 진행했다. 군은 지 난 2018년 11월30일 창랑정을 '장흥향토문화유 산 제17호'로 지정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김모(63)씨가 '창랑정의 소유자'라며 장흥군에 '창랑정을 사라'는 건의서를 낸 것이다.

장흥군 입장에서는 12년 전인 2008년 무료로 기증받은 뒤부터 군 소유로 알고 보수공사까지 하 며 관리해왔는데 느닷없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 물이 나타난 것이다.

장흥군은 그제서야 기증 문화재의 소유권을 살 펴보니 창랑정이 2009년 9월 후손의 한 손자에게 상속돼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건립자 후손 4명의 이름이 적힌 기탁서를 통해 2008년 장흥군이 넘겨받았는데 불과 1년 만에 다



장흥군 탐진강변에 위치한 '창랑정'. 장흥군은 무상으로 창랑정을 기탁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 자 이번엔 돈을 주고 사기로 했다.



장흥군이 '창랑정' 앞에 붙인 안내문. 기탁받았다는 군의 설명과 달 리, '군민의 휴식 공간 및 전통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장흥군 에 무상 기증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적혀있다.

른 사람에게 상속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상속자에게 창랑정을 사들인 뒤 같은해 11월 장흥군에 사달라고 건의한 것이

장흥군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관 리 명목으로 창랑정을 사들이기로 하고 매입비 1억5000만원을 예산 에 반영키로 했다.

지역 문화계 안팎에서는 장흥군 이 기증받은 문화재의 소유권 관계 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면서 빚어 진 일로 보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기증이 아니라 '기탁'을 받은 것이라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서 "기탁 문화재를 지금까지 관리 해오다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라 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흥군이 기증받은 창랑 정 앞에 설치한 안내판과 군 홈페이 지에는 '기증'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흥=글·사진 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손혜원 전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 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손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 날 공판에서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나선 전 문화 체육관광부 국장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내용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었다"고

그는 "공청회는 주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일 간지 등을 통해 사전에 여러 차례 공지됐고,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해당 공청회 에서 공개된 사업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돼 많은 사 람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 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부 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 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

사건번호

020타경

73960

020타경

76464

2020타경

76532

2020타경

2021타경

60190

2020타경

76310

[자동차,중기]

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 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공청회와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는 개발 우선 지역이 어딘지를 특정하기는 힘들며 이처럼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없었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손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 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소 239 1501㎡[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488-3 265㎡[공유자]답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봉로18 자동치

사용본거지:광주 남구 월산동 수박등로 13 자동차

사용본거지:전북 익산시 중앙로9길 24[마│자동치

오세균지분2/13전부.지상소재비닐하우스1

107호등록번호:92라5725 차명:한국토미27

톤카고트럭 연식:2007[기준시점[2021.2.10

]현재시동상태의불량으로주행거리를파악하

지못하였으며참고적으로자동차등록원부성

-3 등록번호:69무0130 차명:티볼리 연식:

동] 등록번호:14더5464 차명:에쿠스 연식

2014[앞뒤번호판없음[운행정지명령으로앞

번호판은북구에영치됨].자동차등록원부싱

주행거리160,000km로기재,현황조사시차량

정운기지분50/100전부.건물만매각,지상소 창고

계기판상주행거리는109,830㎞임]

재냉장설비매각제외1

의주행거리는62,279km임]

동소 114-3 1002㎡

용 도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25,517,000 계분묘소재

14,266,843 지분매각,공유자

14,266,843 우선매수권행사1

15,000,000 보관장소:광주광

15,000,000 산구풍영정길65-

13,000,000 보관장소:광주서

13,000,000 구금호동531,하니

24,000,000 산구산정동156현

10,039,200 우선매수권행사1

회로제한

대주차장

로에프앤씨

보관장소:광주굉

5㈜대명씨앤피

비고

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 30일부터 시행

광주·전남 아동쉼터 확보 비상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제도' 가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피해 아동 거주 공 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년에 2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강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해야 하 기 때문에 아동일시보호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 내 시설이 여의치 않기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광주 2 곳, 전남 9곳 등총 11곳 뿐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지난해 말 여수에서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숨져 냉동실에 서 발견된 신생아의 형제들도 전남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생활 중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원은 5~7명에 불과해 '즉각 분리제도' 시행으로 인한 쉼 터 부족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쉼터 1곳은 입소 정원(7명)을 가 득 채운 상태이며 또 다른 쉼터는 지난달 말 정원 을 초과한 8명이 생활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달

말에는 두 곳 쉼터 정원이 가득차 쉼터를 거치지 않고 아동양육시설로 옮겨진 아이들도 생겨났다.

쉼터의 경우 심리검사나 건강 진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등이 마련된 반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이같은 예산 지원이 즉각 이뤄지지 않아 아동 의 보호조치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쉼터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 쉼터로 찾 아오는 아이들이 늘어날텐데 공간이 부족해 걱정"

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도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광주시의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야 쉼터 1 곳을 확충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설적 여유가 있는 아동양육 시설의 신청을 받아 쉼터로 운영하려 했으나 보건 복지부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됐다"며 "쉼터 확충 전까지는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위기아동 가정 보호사업 등을 활용해 피해아동을 보호토록 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2432건(광주 694건·전남 1738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 황사 공습 광주·전남 내일까지 이어질 듯

16일 광주·전남 지역에 중국 발(發) 황사가 불 어닥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중국 내몽골과 고비사 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16일 새벽 서해안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황사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바이칼호 부근의 고기압 사이에 서 기압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발생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해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 서쪽지역 을 중심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황사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기 상청은 16일 광주·전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매우나쁨'으로 17일은 '나쁨'으로 내다봤다.

한편, 광주지역 황사 발생 일수는 2018년 5일, 2019년 3일, 2020년 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류 위조해 치매 어머니 재산 가로챈 딸 실형

광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위조한 서류로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재산을 가 로챈 5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 두희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 의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A씨는 2017년 6월, 80대 어머니 B씨 명의의 토 지(979㎡)와 주택(33.9㎡)를 증여받기 위해 소 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 계약서를 위조해 등 기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명의 부동산을 다른 가족들을 제외하

고 홀로 증여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몰래 독차 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노년성 중증 치매를 앓는 B 씨를 요양병원에 입소시켜 오빠들과 여동생이 어 머니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장은 "어머니가 중증 치매로 의사 결정 능 력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 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A씨 가 어머니를 일정 기간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과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하지 않는다"고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이달말까지 일제단속

광주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광주상생카드 부 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시는 15일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 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맹점별 판매 현황을 분석한 뒤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 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제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비자를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사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13418 5호 [성산아파트] 59.86㎡ 60,000,000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21-31, 101동 15층 237,000,00 2020타경 1504호 [나주남평강변도시양우내안애리버 237,000,000 67859 시티1차1 84.937㎡ 광산구 선운로33, 104동 2층 203호 [선암 2020日さ 267.000.00 75553 동,선운지구진아리채] 71.5672㎡ 267,000,00 120,302,380 일괄매각,제시외 2020타경 동구 무등로499-8 53.88㎡ 부속건물 광3.9 단독주택 120,302,380 건물포함 75812 6㎡ 문간1.98㎡ 제시외 보일러실 등 8.9㎡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8,000,00 [대지/임야/전답] 334,605,000 득자격증명요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307-1 9694㎡[공유 29.082.00이지분매각.공유지 자류흥섭지분1/2.연고미상분묘12기정도소 29,082,000 우선매수권행사1 회로제한 북구 장등동 778-5 2952㎡[첨파이프조천막]단 153,50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붕1동,철파이프조뼈대4동,저온창고1동및 153,504,000 요

28,000,00

87.833.000 일괄매각.목록1.4

87.833.000 농지취득자격증명

동구 동계로39-2, 씨동 2층 201호 [산수동 다세대

수목[블루베리약1200주]매각제외]

를이루어답으로이용중]

73960

동소 123-6 1853㎡[임야는인접지들과연계 임야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

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매각기일 : 2021. 3. 30. [화] 10:00 매각결정기일 : 2021. 4. 6. [화] 16:00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정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 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회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 지서를 청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 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동콕신청을 마친 일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포의 기재 및 입찰보충증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강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포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 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 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

2021. 3. 1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